

전주형 착한 선결제 동참 이어져

선결제 금액 10억원 돌파 · 돼지카드 충전금액 1000억원 육박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코로나19로 버겁게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착한 선결제 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는 3개월여 만에 가입자 11만 명을 넘어서고 충전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시작된 지 21일 만인 이날 오후 1시까지 5,554명(총 10억781만7,035원)을 선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경기가 위

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주의 공동체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게 취지다.

지난달 20일 시와 출연기관, 산하 단체 임직원들로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안대 노총과 지역 기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민간·자생단체, 언론계, 여성·사회복지단체, 어린이집 운영자 등 각계각층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동네마트, 자동차 수리점, 이·미용업체, 음식점 등에서 10만~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영수증과 선결제 쿠폰을 찍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선결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시는 그간 10%였던 돼지카드 할인 혜택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늘어난 게 확산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인증건수와 돼지카드 발행 건수를 일별로 비교한 결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전까지 돼지카드의 평일 가입자 수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이었으나 캠페인 진행 후 3,000여명까지 늘어 상승효과가 극대화됐다. 지난해 11월 발행된 돼지카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가입자 수는 11만 3,264명, 충전금액은 976억4,746만 4,5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돼지카드 혜택과 함께 걸어지고 있는 선결제 대열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주 시민들께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또 다른 도시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면서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7개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지원

용자사업 약정식 갖고 공모 선정된 기업에 총 5억9000만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에 용자를 지원한다.

시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6층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실에서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용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용자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1차 용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시민참여태양광발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건강증진활동) ▲자연음식문화원(음식나눔) ▲맑은누리(위생, 소득업) ▲엑솔(농가판로개척) ▲필리그란폴스튜디오(생활체육) ▲플로에듀(심리치료) 등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으

로, 농업 분야 청년기업부터 시민참여형 그린뉴딜기업, 맞춤형 심리치료 기업, 생활스포츠 기업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다양하다.

이번 약정을 통해 시는 7개 기업에 총 5억9,000만원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용자해주게 됐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상환이자는 연 2.5% 고정금리이다.

시는 이번 용자 지원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유망 사회적경제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활용한 용자사업을 지속 접수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기업 용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숨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적응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중개기관으로 선정해 용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6층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실에서 송병주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용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용자사업 약정식을 가졌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소기업 모집

2년 이상 근무 청년 300만원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 · 이자 받아

전주시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

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참여 기업에 국비지원금으로 청년근로자 1인당 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용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업 모집은 공제 대상 청년이 50명이 될 때까지 한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협력팀(063-281-2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시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최선

전주시, 수도행정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실시간으로 수질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관로를 전면 개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최훈식)는 9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비전으로 한 수도행정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상수관로 전면개량 선진 급수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생산 공급 ▲친환경 하수관리로 생태도시 구현 ▲수요자 중심의 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상수관로를 전면 개량하는 등 선진 급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수도 수요량 변화에 따른 공급과 수요 능력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비 92억원 등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해 수질사고 발생 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효천지구 개발로 인한 효자배수구역의 원활한 용수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압장을 추가 설치, 서부 신시가지 구역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수불출 민원도 해결키로 했다.

시는 또 수질검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 생산·공급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용담호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정수지와 수도물 생산 공급 ▲친환경 하수관리로 생태도시 구현 ▲수요자 중심의 수도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에도 집중한다.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덕진 중앙1부구 등 7개 구역 하수관로 201.2km, 배수설

비 7,411개소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특히 호성동 일원의 아중처리구역과 반월동 일원의 하수처리범위구역에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여기에 도심지역 확대와 유입구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로 수용가에 대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노후 급수설비 개량이 필요한 공사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상수도 체납 단수 및 누수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문자로 알리므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다자녀, 해고 없는 도시 동참업체 등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올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상수관로 전면 개량으로 선진 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먹는 물 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축물 매매 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 위한 공인중개사법 본격 시행

건축물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임차인 계약갱신 여부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건축물 매매

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민간임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

를 받아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사무기간과 임대개시일 등을 기재해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장치가 강화됐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